

북한의 대한민국 언론 위협

편협은 1990년대 들어 남북언론인 교류를 추진했다. 동구권 붕괴이후 한반도에서의 해빙무드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때였다. 편협은 나름의 조직을 만들기도 했으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과 공동으로 북한측과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북한의 조선일보와 KBS에 대한 폭파위협은 전 세계 언론인들을 경악케 했다. 북한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입북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억류시키기도 했다. 이에 편협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당국의 위협 행위의 즉각 중단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1) 남북교류 추진

편협은 1990년 9월 남북언론인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편협 회장단은 남북언론인의 상호 방문과 상호방문 취재, 남북언론 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에 대한 합동세미나 등의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남북언론인 교류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 玄昭煥 연합통신 상무)를 설치했다.

편협은 또 2000년 7월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남북한 언론교

류를 위해 북조선기자동맹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서한은 신문협회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통해 북측 최우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에게 전달됐다.

3개 단체는 이 서한에서 “그동안 남북한 언론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화해 협력은커녕 오히려 반목과 대립만 조장해 왔는데 이는 초보적인 교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조선기자동맹 대표단과 정례회담 및 상호방문’ ‘평화통일을 위한 언론인 공동선언 마련’ ‘남북한 공업지역 및 경제특구 상호 방문 취재’ ‘백두산과 한라산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생태계 환경교환취재’ ‘서울과 평양에 상주기자 파견’ 등을 제안했다.

2) 북한의 조선일보 KBS 폭파 위협

북한은 조선일보에 대해 1997년 6월 24일 사설 ‘지옥참상 … 김정일 물러나야’ 를 문제 삼아 사옥 폭파위협을 가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22일 방영된 KBS 일요스페셜은 북의 지옥 같은 참상을 충격적으로 전했다”며 “이 기막힌 영상을 바라보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북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김일성-김정일 체제 지배자들에게 대한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오늘의 생지옥상 하나로 김정일 정권의 존재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는 1백% 소멸했다”며 “우리는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한 퇴진요구’의 보편타당성에 근거해서, 결코 ‘외국’ 일 수 없는 우리 땅 북녘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 김정일 정권이 자의든 타의든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6월 27일 평양방송 정오 보도를 통해 이 사설을 북한에 대한 ‘도발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조선일보사에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평양방송은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조선일보를 통하여 먼저 불질을 한 이상 우리도 가차없이 불질할 응당한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의 불질은 조선일보사가

존재를 마치는 시각까지 각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또 “우리는 조선일보사를 더 이상 남조선 언론기관이 아니라 간악한 범죄집단으로 인정한다”며 “지금 우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멸적의 총검을 틀어잡고 조선일보사 악질 패거리들을 단호히 징벌할 복수심으로 끓어 번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여러 단체의 성명을 통해 ‘최후까지 복수’ ‘조선일보 폭파’ ‘천배백배 복수’ 를 장담하며 협박했다.

북한은 또 이해 11월 KBS가 제작 중이던 ‘진달래 꽃 필 때까지’ 라는 드라마에 대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KBS를 폭파하고 작가 연출가 등 제작진을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드라마는 8부작이었으며 탈북한 북한 무용수의 수기가 주요 내용이었다. 수기에는 기쁨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며, 드라마는 그 같은 내용과 함께 무용수의 북한에서의 생활을 그렸다.

북한은 또 2002년 2월 4일에는 조선일보 1월12일자 만물상란에 실린 ‘아리랑 축전’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아 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총련 등 4개 단체에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고 매장시키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북한이 즉각적이고 직접 나서 조선일보를 비난 위협하던 양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북한은 1월 17일 남한의 통일연대가 “조선일보가 이북 민중 스스로 매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을 ‘관광상품 개발’ 이니 ‘파시즘적 정치예술헌’ 이니 하는 것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계기로 남한 내 4개 단체를 선동 ‘간접 위협’ 했던 것이다.

3) 조선일보 KBS 기자 입북거부

북한은 1997년 조선일보 사설문제를 트집 잡아 이후 조선일보 기자들의 방북취재를 거부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개시를 알리는 남한 언론들의 방북 취재 때 조선일

보와 KBS 기자들의 입북을 거부하다 관광일정 마지막 날에야 하선을 허락했다. 당시 국내 관계자들은 “북측에 이유를 묻자 ‘조선일보와 KBS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했다”고 밝혀, 사실과 드라마건과 관련한 보복성 입북 거부였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또 2000년 6월 27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에 포함된 공동취재단 6명중 조선일보 김인구 기자의 입북을 거부했다. 김기자는 회담장소인 금강산까지 갔으나 북측의 거부로 하선조차 하지 못했다. 또 남측 박기륜수석대표가 북측 최승철 단장(수석대표)과 단독접촉을 갖고 김기자의 입북허용에 대해 협의했으나 북측의 태도변화는 없었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북측이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해 입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거부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승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 문광위 소속 박종웅 남경필 고흥길 정진석의원 등은 “북한측의 남쪽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북측의 의도대로 끌려가선 안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3년 10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의 북한 개성공단시찰 때 국회공동취재단에 포함된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을 거부했다. 국회는 취재기자단을 1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추첨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북한은 국회가 통보한 130여명의 방북단중 조선일보 기자와 일부 국회보좌진을 제외한 86명에 대해서만 초청장을 보내왔다.

4) 조선일보 기자 억류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조선일보 사진부 김창중기자는 2000년 12월 1일 북측에 의해 3시간여 동안 억류당했다. 김기자는 이날 밤 11시 40분쯤 북측 인사 10여명이 모여 있는 방으로 유인된 뒤 ‘조선일보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났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자는 자신은 사진기자이며 기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으나 북측은 “김선생이 조선일보에서 월급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분쯤 지나 남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과 접촉하기 위해 이 방을 찾아왔다가 김기자를 발견, 북측 연락관들에게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감금이나 인질이 아니고 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남측 연락관은 “신변안전보장 각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김기자를 빨리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사과하기 전에는 못 내보낸다”며 버텨 설전이 계속됐다.

북측은 새벽 2시 30분쯤 “김기자가 필요없는 부분까지 사진을 찍었다”며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자는 “문제될 사진은 없다. 정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다”며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건네줬고, 객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기자는 2일 방문단이 호텔을 떠나기 15분전 쯤인 낮 12시30분 북측으로부터 장비를 되돌려 받았으나 김기자가 북에서 찍었던 사진은 대부분 지워졌고 촬영한 필름 1통은 돌려받지 못했다.

5) 편협의 대응

편협은 1997년 7월 1일 조선일보 폭과위협에 대해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한국언론 전체에 대한 심각한 탄압행위라고 규정, 북한 당국에 위협행위의 즉각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도 1997년 7월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 “북한의 여러 기관이 조선일보 사설을 트집 잡아 연일 보복을 공언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세계신문협회 제이미 시로츠키 회장은 세계 1만5천개 매체를 대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공函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자유언론의 정당한 기능의 하나며 국제 관례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협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 1백여 국가의 언론사주 및 편집인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IPI) 요한 프리츠 사무국장은 “언론사의 존재와 그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소름끼치며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편협은 KBS 폭파와 제작자 살해 위협에 대해서도 1997년 11월 20일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협은 2000년 6월 조선일보 기자의 입북거부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 “취재단의 추첨에 따라 풀기자가 된 특정언론사 기자를 그 소속사의 그동안 보도내용과 논조를 문제 삼아 입북시키지 않은 것은 남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입북거부와 관련 조선일보 기자들은 2000년 6월 30일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언론자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편협은 김창중 기자 억류에 대해서도 “북한측이 김 기자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취재사진을 대부분 삭제한 것은 자유언론에 대한 폭거이자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무례”라고 성토했다.

편협은 아리랑 축전관련 북한의 조선일보위협에 대한 성명에서는 “명백한 언론자유침해행위이며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을 이용해 남한 언론을 길들여보자는 고도의 책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